

亞문화전당 건립 2년 늦춰진다

이병훈 단장 “별관 논란으로 공정 차질, 빨라야 2014년 완공” 현 정부 임기내 건립 무산...亞문화수도 사업 변질·축소 우려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시기가 1년 여 동안 논란을 빚은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 탓에 당초 보다 2년 연장된 2014년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의 완공이 차기 정부로 넘겨지게 됐으며, 자칫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새정부 출범 이후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정치 쟁점화할 경우 사업 차질이 물론 궤도 수정돼 배제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20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장감각 보고에서 “별관철거 논란으로 문화전당 건립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빨라야 2014년에야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전당 완공 시기가 늦춰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07 랜드마크 논란으로 전당의 완공시기가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늦춰진 바 있다.

추진단은 보고서에서 논란이 된 별관철거 문제가 지난 9월22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의 건물 일부 존치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향후 문화전당의 설계 변경에는 최소 10개월 여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청별관 구조정밀안전진단(3개월), 별관보존방식 결정 및 개념설계(3개월), 문화중심도시 사업계획 변경, 예산협의(3개월), 문화전당 기본 및 실시설계변경(4월) 등 1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하반기에야 문화전당의 전체 공정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문화전당 건립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예정대로라면 42.3%에 달했을 공정률이 10.8%선에 머물고 있다. 공사 내용면에서도 지하연속벽체 구축, 흙막이, 보존 건물 지반 보강공

사 등 문화전당의 주 공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문화전당의 구체적인 완공시점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완공시기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문화전당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돼 안정적인 발판을 구축하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사업이 얼마든지 변질,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자체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다. 이병박 정부 출범 초기 문화수도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폐지위기에 몰린 바 있다.

추진단이 전당 완공시기로 밝힌 2014년은 새정부가 들어서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문화전당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예산이 최소 54억원에서 최고 71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8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별관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정된 금액으로, 당시 3분지 1 이상 보존을 전제로 존치방식이 결정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이병훈 단장은 “별관 논란으로 1년 3개월 여를 소비한데다 향후 별관 존치 문제 등을 결정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사차질을 최소화하고 별관의 존치 개념을 살리는 보존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흥길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내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현장을 방문한 뒤 이병훈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으로부터 철거논란을 빚었던 도청 별관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문방위 문화전당 현장 방문 이모저모

“문화콘텐츠기술연구 광주에 설립돼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사 현장을 방문,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 문화인프라 가운데 하나인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조영택·서갑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CT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CT연구원이 빠지면 거대한 문화수도 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 보여주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산업을 선도할 문화콘텐츠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문화전당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수익성과 재정자립도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광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문화수도 조성사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진흥지구 조성 정부지원 촉구

○20일 문화전당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높일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전병헌 의원은 “(옛 전일 빌딩 일대)투자진흥지구 조성 관련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지가 상승 등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된다”며 “부지매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문화전당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민간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정부와 자치단체간 매칭펀드 비율 문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배정을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안 한중산단 성공위해 국책은행 PF 참여해야”

김효석의원 한은 국감서 제기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최초이자 최대 공동사업인 무안·중 국제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감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0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중 국제산업단지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PF 참여를 꺼리면서 사업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측은 전체 사업의 가운데 각각 4천억 원 이상을 PF를 통해 확보하기로 하고, 중국은 국가개발은행이 PF 주간사를 맡아 현재 51%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여파와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PF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기업 30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 국제산단은 전남이 중국 자본과 한국기술이 결합한 제품 생산의 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항공수요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무안과 전남지역의 문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이후 박재완 국경

기획수석비서관이 한중 국제산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금융권도 경기가 풀리면서 PF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중 국제산단은 무안군 무안읍과 청계·현경면 일대 17.7km 부지에 1조7천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중국 상동성·중경시 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오는 2012년까지 택지개발과 분양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5만5천명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형 복합기업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도 산하 전방개발공사 등과 중국 중경시 지산그룹 등은 자본금 1천537억원 규모의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 측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중국제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 1월 중국정부가 투자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중국 상무부 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 지정 승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며 따라 한국과 중국의 최대 경제협력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회복”

IMF “한국경제 2007년 수준 원상 복구 5년 필요”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GDP)이 2012년이나 2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국민 소득은 1만6천 달러대로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로부터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에 이르러야 2007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한국 경제가 원상 복구되는데 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IMF는 본 것이다.

IMF는 지난 5월 세계경제전망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014년에 가서도 2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비판했는데 최근 환율 하락과 경기 회복을 근거로 2만 달러 달성 시점을 대폭 앞당긴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2007년 1인당 GDP 2만1천653 달러를 기록하며 2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만9천136 달러로 줄었으며 올해 1만6천450 달러, 내년 1만7천547 달러, 2011년 1만8천988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2년 2만549 달러로 2만 달러를 넘어서고 2013년 2만2천170 달러, 2014년 2만3천763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당 GDP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3개국 가운데 2007년 28위, 2008년 31위였는데 올해는 슬로바키아(1만6천315달러)와 대만(1만5천373달러)에 이어 31위에 턱걸이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슬로바키아(1만7천789달러)보다 뒤지면서 32위까지 떨어진 뒤 2012년까지 슬로바키아와 대만에만 우위를 보이며 3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관주비학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혈관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nanom
나노메딕